

건설동향브리핑

제479호 (2014. 9. 29)

■ 경제 동향

- 서울시 전·월세 거래량 유지, 아파트 전세 거래 급감

■ 정책·경영

- 2014~18년 국가 재정 운용 계획의 주요 내용
- 2014년 해외건설, 중동 지역 수주 확대 추세

■ 정보 마당

- 노후 소형 사회/생활 기반 시설물 현황과 대책(I)

■ 연구원 소식

- 건설 논단 : 이제 ‘안전’ 비용 치를 때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Construction & Economy Research Institute of Korea

서울시 전·월세 거래량 유지, 아파트 전세 거래 급감

- 아파트 월세 비중 급상승, 도심권 및 관악구 월세 비중 높아 -

■ 1~8월, 서울시 전·월세 거래량 전년 수준 유지

- 서울부동산정보광장¹⁾에 의하면, 2014년 1~8월까지 서울시의 주택 전·월세 거래량은 3만 2,597호로, 전월 대비 21.9% 감소, 전년 동월 대비 3.9% 증가함.
 - 전월 대비로는 아파트는 0.7% 증가하였으나, 단독·다가구가 39.4%, 연립·다세대가 11.0% 각각 감소하여 전반적인 감소세를 나타냄.
 - 전년 동월 대비로는 아파트는 4.9%, 단독·다가구는 8.4% 각각 증가하였으나, 연립·다세대는 5.3% 감소
 - 9월 1~21일까지, 서울시의 주택 전·월세 거래량은 1만 8,824건이며, 전월 대비 13.4% 감소, 전년 동월 대비 2.0% 증가할 것으로 추정됨. 추석 연휴의 여파로 전월 대비 거래량의 변동성이 커진 것으로 판단됨.
- ※ 서울부동산정보광장은 서울시가 운영하고 있으며, 실시간으로 거래량을 공개하고 있음. 현재까지는 8월 셋째 주까지의 거래량이므로 전월과 전년 동월 거래량의 2/3 수준과 비교하여 증감률을 산출함.
- 1~8월까지, 서울시의 전·월세 누적 거래량은 전년 수준이지만, 아파트는 감소하고 단독·다가구는 증가하여 전년 수준을 유지함.
 - 전·월세 누적 거래량은 2.2% 증가하여 전년 수준임.
 - 단독·다가구는 10.4% 증가했으나, 아파트와 연립·다세대는 각각 3.4%, 2.3% 감소함.

<서울시 주택 유형별·계약 형태별 전·월세 거래량 증감률(전년 동기 대비)>

(단위 : %)

구분	전세	아파트	단독·다가구	연립	월세	아파트	단독·다가구	연립
2012년(1~8월)	-6.5	-4.7	-10.6	-4.4	-2.8	-0.8	-7.1	8.5
2013년(1~8월)	-2.2	-2.0	-4.3	0.1	22.2	30.6	17.1	27.2
2014년(1~8월)	-1.9	-8.2	10.0	-3.8	9.2	13.9	10.9	0.1

자료 : 서울부동산정보광장

■ 아파트 전세 거래 감소, 단독·다가구 월세 거래는 증가

- 서울시의 임대차 계약은 전세 거래는 감소하고, 월세 거래는 증가함.
 - 1~8월까지, 서울시의 전세 거래량은 전년 동기 대비 1.9% 감소함. 특히, 아파트 전세 거

1) 전·월세 거래량의 공식적인 통계는 국토교통부 자료이지만, 본고에서는 세부 시군구별, 주택 유형별, 계약 형태별 전·월세 거래량을 제공하는 서울부동산정보광장의 전·월세 가격 공개 자료를 기초로 분석함.

래량이 8.2% 감소하여 가장 크게 감소함.

- 월세 거래량은 전년 동기 대비 9.2% 증가함. 아파트와 단독·다가구는 각각 13.9%, 10.9% 증가하여 증가세를 주도함.
- 단독·다가구는 전세, 월세 모두 증가하여 공급 증가의 영향이 큼. 아파트의 경우, 전세는 감소하고, 월세는 증가하고 있어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판단됨.

■ 아파트 월세 비중 급속 확대, 도심권 및 관악구 월세 비중 높아

- 서울시의 월세 비중이 38.9%에 이르고, 아파트의 비중이 급속 확대되는 것으로 판단됨.
 - 1~8월까지, 전·월세 거래량 중 월세의 비중은 38.9%이며, 전년 동기의 36.4%에 비해 2.5%p 증가함. 단독·다가구 51.6%, 연립·다세대 37.6%, 아파트 25.6% 순으로 높음.
 - 아파트의 월세 비중이 가장 낮으나, 전년 동기(21.7%) 대비 3.9%p 증가하여, 월세 비중의 확대폭이 가장 큼. 아파트를 제외한 유형의 월세 비중 변화는 미미함.

※ 단독·다가구 : 2013년(1~8월) 51.4% → 2014년(1~8월) 51.6%(0.2%p 증가), 연립·다세대 : 2013년(1~8월) 36.7% → 2014년(1~8월) 37.6%(0.9%p 증가)

- 서울시의 아파트 중 도심권과 관악구 지역의 월세 비중이 높고, 양천구, 은평구, 강서구의 월세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 월세의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은 중구로 34.0%에 이름. 다음으로는 관악구(32.4%), 종로구(31.2%), 강남구(29.7%), 동대문구(28.6%)의 순임.
 - 반대로 월세의 비중이 낮은 지역은 양천구(16.8%), 은평구(20.7%), 강서구(20.9%)의 순임.
 - 고용 중심지인 도심권 인근 지역(중구, 종로구, 동대문구)과 젊은 직장인 및 학생의 거주 비율이 높은 관악구의 월세 비중이 높게 나타남.

■ 아파트 전세 거래 감소, 전세 가격 상승에 영향 미쳐

- 아파트 전세 거래가 감소하면서 아파트 전세 가격 불안의 원인이 되고 있음. 특히, 월세 저항이 적은 지역의 월세 비중이 높아 지역적 모니터링 강화가 동반되어야 할 것임.
 - 아파트의 공급이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의 2014년(1~8월) 아파트 전세 거래량은 3년 전인 2011년(1~8월)에 비해 14.2% 감소함. 특히, 월세의 저항이 적은 임차인 거주 지역의 월세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허윤경(연구위원 · ykhur@ceri.k.re.kr)

2014~18년 국가 재정 운용 계획의 주요 내용¹⁾

- 중장기 확대 균형으로 재정 기초 전환, SOC 투자는 축소 계획 -

■ 재정 운용의 여건 변화와 재정 운용의 방향

- 정부는 국내 경기의 회복이 지체되고, 낮은 경제성장률로 세입 여건이 악화될 것을 우려
 - 2014년 2/4분기 GDP(Gross Domestic Product, 국내총생산) 성장률은 전기 대비 0.5% 상승했으며, 이는 7분기 내 최저 수준으로, 경기 회복의 속도가 지연되고 있음.
 - 내수 부진으로 ‘저성장-저물가-경상수지 과다 흑자’의 거시 경제 왜곡 현상이 발생
 - 2013년의 경우, 추경 예산 대비 -8.5조원의 국세 수입 결손 발생
- 2014~18년 재정 운용의 기본 방향은 중장기 확대 균형으로 재정 기초를 전환하고, 재정의 중장기적 기초 체력을 강화하며, 국민 눈높이의 예산을 지향
 - 일자리 창출과 내수 경기의 부양, 창조 경제 등 경제 체질 개선을 위한 투자의 확대
 - 재정 지출 확대→내수 회복→세수 증대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
 - 유사·중복 사업의 통·폐합 등 재정 개혁을 지속 추진, 부정 수급 등의 재정 낭비 근절

<2014~18년 분야별 자원 지출 전망>

(단위 : 조원, %)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4~18 연평균
1. 보건·복지·고용	106.4	115.5	122.6	129.9	137.7	6.7
2. 교육	50.7	53.0	57.5	60.7	63.9	5.9
3. 문화·체육·관광	5.4	6.0	6.6	7.3	8.3	11.2
4. 환경	6.5	6.7	6.5	6.4	6.4	△0.3
5. R&D	17.8	18.8	19.6	20.1	20.4	3.5
6. 산업·중소기업·에너지	15.4	16.5	15.3	14.6	14.2	△2.1
7. SOC	23.7	24.4	22.4	20.7	19.1	△5.2
8. 농림·수산·식품	18.7	19.3	19.1	19.1	19.2	0.7
9. 국방(일반 회계)	35.7	37.6	39.1	40.4	41.7	4.0
10. 외교·통일	4.2	4.5	4.7	4.9	5.2	5.5
11. 공공 질서·안전	15.8	16.9	17.8	18.7	19.5	5.4
12. 일반·지방 행정	57.2	59.2	63.8	67.8	72.4	6.0

자료 : 기획재정부, '2014~18년 국가 재정 운용 계획', 2014. 9.

1) 국가 재정 운용 계획은 중장기적 시각에서 재정 운용 전략과 자원 배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매년 기획재정부가 수립함. 본 계획에서 제시하는 자원 배분 우선 순위는 예산 편성의 기본 틀로 활용됨. 본고는 지난 9월 18일에 발표된 2014년 국가 재정 운용 계획의 주요 내용을 요약 정리하였음.

- 전체 재정 지출은 2014년의 355.8조원 규모에서 2018년에는 424조원 규모로 연평균 4.5% 증가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음.
 - 분야별 지출 전망을 살펴보면, SOC 부문은 2015년에 24.4조원으로 증가하지만, 이후부터 축소해 2018년까지 연평균 -5.2%의 감액을 계획, 12개 사업 분야 중 가장 많이 축소
 - 이에 비해 문화·체육·관광은 11.2%, 보건·복지·고용 부문은 6.7%, 교육 5.9% 증액할 것으로 전망됨.
- 복지과 소득 재분배를 위한 투자를 확대하되, 지출 효율화의 노력을 병행
 - SOC와 같은 경제 분야는 그 동안의 투자 추이를 감안하여 재정 투자를 내실화(축소)하고, 민간 투자 활성화 등으로 보완

■ SOC 분야 재정 투자 계획의 주요 내용

- 정부는 국내 SOC 공급이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SOC 투자를 축소할 계획
 - G20 국가 중 한국의 소득 수준은 중위권 이하인데도 불구하고, 국토 면적당 SOC 시설의 연장 순위를 보면 고속도로 1위, 국도 3위, 철도 6위 수준임.
 - 신규 사업은 지역 공약, 국가 기간망 등으로 최소화하고, 계속 사업은 적기 완공할 수 있도록 집중 지원. 다만, 2015년에 시설 안전 및 유지·보수 투자를 중심으로 확대
 - * 고속도로 연장(km) : 4,116(2014년)→4,182(2015년)→4,808(2018년)
 - * 철도 연장(km) : 3,591(2014년)→3,802(2015년)→4,127(2018년)
- 예방 중심의 안전 관리 체계 및 대중교통의 활성화 지속 추진
 - 교통 사고 잦은 곳·위험 도로 개선, 노후 철도 시설 개량 등 교통 안전 투자를 확대하고, 지역 간 광역 교통 서비스 개선, 주요 터미널·역·공항과 환승 교통 체계 확대 등 추진
- 공업 용수도의 확대, 노후 산단의 재정비 등 산업 단지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울산항·동해항 등 특성화된 항만 개발 사업의 적극적인 추진
- 재정 투자를 보완할 수 있도록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적극 지원
 - 수도권 광역 급행 철도 일산~삼성(3.1조원), 제2서해안 고속도로(2.6조원) 등 대형 민간 투자 프로젝트의 조속 추진

박용석(연구위원 · yspark@ceri.k.re.kr)

2014년 해외건설, 중동 지역 수주 확대 추세

- 플랜트 부문 편중 현상 심화, 금융 동반 진출 증가세 -

■ 8월 말 현재 수주액, 전년 동기 대비 10% 증가한 447억 달러

- 2014년 8월 말까지 금액을 기준으로 한 해외건설 수주는 전년 동기 대비 10% 증가한 수치를 기록, 금년도 목표인 700억 달러 수주 달성에 청신호. 단, 이라크 사태의 확산 여부가 관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 2014년 8월 말까지 수주 현황을 살펴보면, 총 113개 국가에 588개 업체가 진출한 것으로 집계됨.
- 공사 건수로는 442건으로, 2013년도 같은 기간의 473건에 비하여 7% 정도 감소했으나, 금액 기준으로는 1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건당 수주 규모가 확대되었음을 시사함.

■ 지역별 : 아시아에서 다시 중동으로 선회, 신흥 시장으로 중남미 부상

- 지역별 수주 비중을 보면, 중동 지역이 259억 달러로 58%를 차지하고 있으며, 아시아와 중남미에서 각각 89억 달러(20%)와 56억 달러(12%)를 수주한 것으로 나타남.
- 2013년도의 지역별 수주 실적을 보면, 아시아 지역이 42.2%(276억 달러)로, 40.0%(261억 달러)를 차지한 중동에 비해 근소한 차이로 1위를 기록하였음.
- 2014년 8월 말 현재, 중동에서의 수주는 전년 동기 대비 49%나 증가한 반면, 아시아 지역에서의 수주는 무려 42%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중동 지역이 재부상함.
- 한편, 중남미 지역의 경우, 전년 동기에 0.9억 달러(0.2%)에 불과하던 수주액이 2014년 8월 말 현재 56억 달러(12%)로 대폭 증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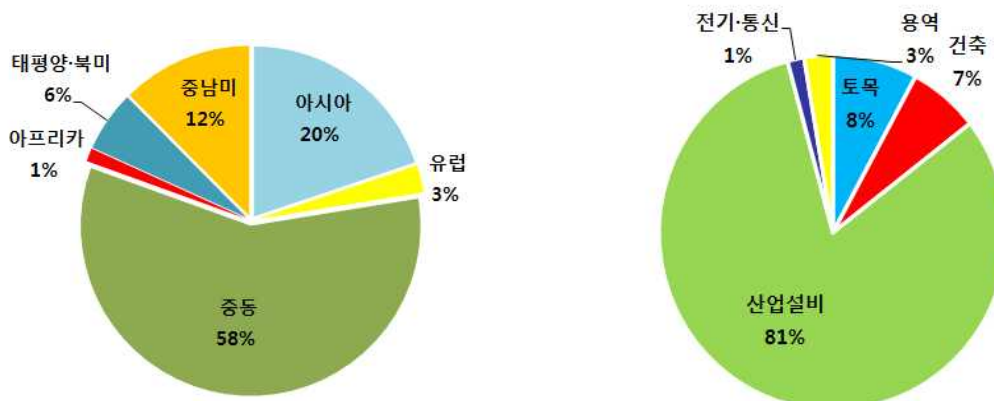
■ 공종별 : 플랜트 편중 현상 심화, 8월 말 현재 81% 차지

- 2013년 한 해 동안 총 수주액의 60.7%(396억 달러)를 차지했던 플랜트가 2014년 8월 말 현재 전체 해외건설 수주의 80% 이상(364억 달러)을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 공종은 20% 내외로 미미한 수준에 그침.
- 2013년 총 수주액의 27.8%(181억 달러)를 차지했던 토목의 경우, 2014년 8월 말 현재

8%(35억 달러) 수주에 그치고 있으며, 건축은 건수는 많지만 건당 금액이 미미하여 총 수주액의 7%(29억 달러)에 불과함.

- 플랜트 수주를 상품별로 보면, 정유 공장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는 발전소, 정유 시설의 순으로 나타남.
- 용역 분야의 경우, 2005년 이후 설계를 중심으로 CM, 감리 분야의 진출이 증가함.

<2014.1~8월 지역별 해외건설 수주 실적> <2014.1~8월 공종별 해외건설 수주 실적>



자료 : 해외건설종합서비스(www.icak.or.kr)

■ 금융 동반 진출 증가 추세, 다자간 개발 은행 재원 공사 수주 전략 강화해야

- 2013년 및 2014년 상반기에 수주한 해외 건설공사를 재원별로 구분해보면, 전반적으로 발주처 재원 공사가 80% 내외로 주류를 이루지만, 2014년 들어 시공사 금융 제공 공사나 투자 개발형 공사 수주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2013년 상반기에 85%였던 발주처 재원 공사가 2014년 상반기에는 78%로 7%p 감소한 반면, 2013년 상반기에 7%를 차지하였던 시공사 금융 제공 공사의 경우, 2014년에는 17%로 10%p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이는 2014년에 43억 달러 규모의 베네수엘라 푸에르토 라 크루즈 정유 공장 고도화 설비 사업 등 대규모 사업을 시공사 금융 방식으로 수주한 결과임.
 - 반면, 세계은행(World Bank), 아시아개발은행(Asian Development Bank, ADB)과 같은 다자간 개발 은행(Multilateral Development Bank, MDB)이나, 일본국제협력은행(Japan Bank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JBIC) 등과 같은 외국계 원조 기관의 재원 공사 수주는 2013년 상반기의 ADB 재원 공사 4%를 제외하고는 전무함.

김민형(연구위원 · mhkim@cerik.re.kr)

노후 소형 사회/생활 기반 시설물 현황과 대책(I)¹⁾

- 소규모 취약 공공 시설물의 전수 진단 및 건강성 회복에 대한 투자 시급 -

■ 공공 시설물 안전 관리 사각 지대인 노후 소형 사회/생활 기반 시설물

- 국민 생활과 밀접한 경로당, 어린이집, 농어촌 교량, 옹벽 등의 소규모 취약 시설물 약 13만 개 소에 대한 효과적인 안전 점검 및 진단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현행 공공 시설물의 안전 관리는 「시설물 안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특법」)에 의해 약 9만 개 소의 대형 시설물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음.
 - 또한, 「재난 및 안전관리법」(이하, 「재난법」)에 의거하여, 중앙정부 및 지자체가 관리하고 있는 20만 개 소의 소형 사회/생활 기반 시설물(특정 관리 시설물)은 비전문가에 의한 형식적인 점검만 이루어지고 있음.
- 교량 시설물의 경우, 전국적으로 2만 9,000개 소의 교량이 존재하고 있으나, 「시특법」 관리의 대상인 연장 100m 이상인 대형 교량 9,600개 소를 제외한 약 2만 개 소의 소형 교량에 대한 안전 상태 등의 실태 파악이 불가능함.
 - 정부는 사회 복지 시설, 전통시장, 농어촌 교량, 육교, 옹벽 및 절토사면 등의 소규모 취약 시설에 대한 무료 안전 진단을 시설 관리 주체 기관이 요청시, 시행하는 방안을 최근(2014.7.15)에 법제화하였으나, 인력과 예산 부족으로 인한 실효성 논란이 제기됨.

■ 종외 사회/생활 기반 시설물의 전수 점검을 통한 「안전 실태 백서」의 발간 및 예산 반영

- 「시특법」 대상 시설물이 아닌 33만 개 소의 ‘종외(種外) 사회/생활 기반 시설물’에 대한 전수(全數) 점검과 선택적 정밀 진단을 시행하고, 점검 및 진단 결과에 따라 개·보수 및 성능 개선을 통한 시설물의 건강성 회복 프로젝트의 추진을 제안함.
 - 「시특법」 시행령 개정(2014.7.15)에 추가된 무료 진단 시설물을 포함한 13만 개 소의 ‘소규모 취약 시설물’과 중앙정부 및 지자체가 관리하는 20만 개 소의 ‘소형 사회/생활 기반 시설물’을 전수 점검의 대상으로 함.
 - 국공립·법인·직장·민간 운영의 어린이집, 도서관(연면적 3,000㎡ 이상), 학원(연면적

1) 본고는 지난 8월 26일, 대통령(의장) 주재로 개최된 제5차 국민경제자문회의의 ‘국가 안전 대진단과 안전 산업 발전 방안’ 중 사회/생활 기반 시설물의 건강성 및 사용자 안전성 제고를 위한 단기 성과 실천 과제를 주제로, 4회 계재 예정임.

1,000㎡ 이상 또는 수용 인원 100명 이상) 등과 같은 어린이 및 교육 관련 시설의 포함은 필수적임.

- 33만 개의 종외 사회/생활 기반 시설물에 대한 전수 점검은 2014년 말까지 완료되어야 하고, 종외 사회/생활 기반 시설물에 대한 「안전 실태 백서」는 2015년 4월 이전에 발간해야 함.
- 정부는 종외 사회/생활 기반 시설물의 안전성 제고를 위한 소요 예산을 2016~20년 국가 재정 운용 계획에 반영함.

■ 전국 단위 단기 집중 시설물의 점검 및 진단 시행 방안

- 국민 대진단 업무 담당 중앙정부 기관(예컨대, 안전행정부)은 전문기관(예컨대, 한국시설안전공단), 또는 전문가를 통해 종외 사회/생활 기반 시설물의 점검 및 진단 기본 계획과 가이드를 마련하고, 기획재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소요 예산을 확보할 것을 제안함.
- 소규모 취약 시설물의 관리 주체를 관리하는 해당 중앙정부 기관, 혹은 지자체는 해당 점검 및 검진, 안전 실태 백서 작성 등 업무를 총괄적으로 관장함.
- 이러한 계획에 따라 시행되는 점검 및 진단에는 단기간에 집중적인 인력 투입이 요구될 것이며, 유사 업종 및 관련 학과의 유휴 인력 일자리 창출과의 연계 방안이 필요함.
- 유사 업종의 실버 인력 및 일자리 변경 희망자 등 유사 업종의 유휴 인력을 대상으로 한 사전 교육을 실시하고, 점검 및 진단 업무에 투입함.
- 전국 대학의 토목·건축·안전 등의 유사 학과의 졸업 예정자와 졸업생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과 연계함.

■ 기대 효과

- 종외 사회/생활 기반 시설물이 대부분 국민 생활 밀착형이고, 전국적으로 분포됨에 따라 ‘국민 참여형 안전 의식 제고 캠페인’의 효과가 기대됨.
- 건설 관련 유사 업종의 유휴 인력 및 건설 관련 학과 전공자의 일자리 창출
- ‘시설물 신규 건설시장’에서 안전성 및 기능성 제고를 위한 개·보수, 성능 개선, 교체 등과 같은 ‘시설물 유지 관리 시장’의 확대에 대한 준비

이영환(연구위원 · yhleec@cerik.re.kr)

■ 주요 정부 및 기타 공공, 유관기관 회의 참여 활동

일자	기관명	주요 내용
9. 24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영주 위원장실	• ‘안전한 사회 건강한 일터 만들기 정책 토론회’에 건설산업연구실 심규범 실장 건설 산업 분야 토론자로 참여
9. 25	해외건설정책지원센터	• ‘제4차 해외건설 정책 자문위원회’에 건설정책연구실 김민형 실장 참여 - 해외 건설 플랜트 정책 세미나 추진 방안 논의 등
	기획재정부	• 부동산정책팀 주최, ‘주택 정책 방향 관련 업계 간담회’에 건설경제연구실 허윤경 연구위원 토론자로 참여
9. 26	한국터널지하공간학회	• ‘TBM 산업발전포럼 세미나’에 건설정책연구실 최민수 연구위원 주제 발표자로 참여 - 주제 : TBM 수요 확대와 정책 지원 방안

■ ‘2015년 연구 과제’ 공모

- 공모 기간 : 2014. 9. 15(월)~10. 10(금)
- 제안 대상 : 건설 유관 단체, 정부 부처(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건설기업 등
- 기 타 : 세부 내용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홈페이지(www.cerik.re.kr) 참조

■ ‘민간투자사업 회계/세무 실무 과정’ 모집

- 일 정 : 2014. 10. 14(화), 총 1일, 8시간
- 장 소 : 건설회관 9층 건설산업연구원 연수실
- 대 상 : 건설기업 민간투자사업 실무자, 유관기관 및 단체 등
- 참가비 : 180,000원/인

■ ‘민간투자사업 추진 전문 과정’ 모집

- 일 정 : 2014. 10. 28(화)~30(목), 총 3일, 21시간
- 장 소 : 건설회관 9층 건설산업연구원 연수실
- 대 상 : 건설기업 민간투자사업 실무자, 유관기관 및 단체 등
- 참가비 : 450,000원/인
- 공통 사항 : 본 연구원은 노동부 지정 교육 기관으로, 고용보험 납부 사업장의 재직 자일 경우, 교육비 중 일부가 환급됨(우선 지원 대상 기준, 30% 내외). 단, 1일 교육일 경우 대형 기업은 환급 대상에서 제외
- 문 의 : 기업지원팀 교육 담당(Tel.3441-0691, 3441-0848)

이제 ‘안전’ 비용 치를 때다

바야흐로 예산 철이다. 정부가 발표한 여러 정책들이 실제 집행될지, 또는 공치사에 그칠지 정부 예산에서 드러날 것이다. 세월호 참사를 겪은 올해는 특히 ‘안전’이라는 키워드가 부각되고 있다. 안전 사고에는 자연 재해와 시설물 사고가 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선 시설의 물리적 개선이 가장 필요하다. 그동안 충분한 투자가 이뤄져 사회기반시설이 어느 정도 갖춰졌다 하더라도 노후 시설에 대한 유지보수는 지속돼야 한다. 보다 안전한 대체 시설 건설이 됐든, 기존 시설의 개량이 됐든 지속적인 투자가 이뤄져야 시설물의 안전이 담보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국가재정운용계획이나 공약가계부를 보면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2017년까지 매년 2조원 정도의 감축이 예정돼 있다. 안전을 위한 충분한 투자가 가능할지 걱정이다. 새로운 경제팀의 출범과 함께 경제 정책과 예산 편성의 방향에 변화의 조짐이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SOC 예산 감축 추세를 되돌리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SOC 예산 자체를 늘리기 어렵다면 공공 질서 및 안전 분야 등 다른 항목을 반영해 안전 관련 투자를 확대해야 할 것이다. 안전·복지·대중교통 등 생활형 SOC에 대한 투자는 그 자체로서도 의미가 있지만 고용 창출·내수 증진 등 국민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

안전을 위한 예산 확보도 중요하지만 집행 과정에서도 개선의 여지가 많다. 단가 후려치기, 기술이나 품질보다 가격을 중시하는 최저가낙찰제도 등은 지나친 저가 투찰을 유도하며, 부실 시공·안전 경시 풍토를 조성하고 있다. 시설공사 낙찰률이 70% 수준에 머물고 심지어 시설물 안전 점검 용역은 정부 고시 금액의 절반에 낙찰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공사비가 깎이면 시설물 안전과 함께 현장 인력의 안전 사고도 우려된다.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따르더라도 적정공사비가 보장되는 제도적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

예산과 제도가 마련돼도 의식의 변화가 수반되지 않으면 안전을 위한 국가적 시스템이 마련됐다고 보기 어렵다. 우리는 시설의 유지보수, 또는 운영 효율화보다는 신규 투자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예산의 제약을 감안해 하드웨어에 치중하기보다 효율화에 초점을 맞춘 소프트웨어의 개선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가장 필요한 인식의 전환은 대가 없이 안전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이다. 안전 관련 기준을 강화하자라는 목소리가 높지만, 과연 그에 수반되는 지출을 뒷받침할 의지가 있는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이제 슬픔·분노·격론의 시간은 지나갔다. 안전에는 비용이 따른다는 가장 상식적인 원칙이 지켜지는지 예산 편성 과정을 냉정히 지켜볼 것이다. <서울경제, 2014. 9. 15>

김흥수(원장 · infra@cerik.re.kr)